

종합·해설

범여권 '통합방식' 정면 충돌

우리당 "후보중심 창당... 개혁 세력 포함"

민주당 "당 대 당 통합 불가... 先창당해야"

범여권 통합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탈당그룹, 민주당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일단 통합 논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후보 중심의 제3지대 대통합을 내세우며 민주당-중도통합신당모임을 공격했다.

16일 정세균 의장은 "열린우리당에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개혁 세력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 분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겠느냐"며 "이는 대선을 포기하겠다는 태도"라고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그들만의 특권을 위한 소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정동영 전 의장은 "통합을 위해 다른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통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 입장을 보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후보중심 제3지대 신당창당'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정 후보 중심의 통합은 예정처럼 인물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으로 전형적인 구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중심의 대통합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영달 원내대표.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통합할 경우 민주당도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 한나라당과의 대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우리당과 민주당은 그 이념과 정책이 다르고

따라서 부분별하게 통합을 할 경우 한마디로 잡탕당이 된다"며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17일 2차 통합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통합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신당의 성격을 놓고 통합신당모임 측에서는 '도로 민주당'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민사회 세력과 민생정치모임 등의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영입 세력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당 창당 방식을 놓고도 '새천년 민주당' 방식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방식을 주장하는 통합신당모임의 입장차가 상당한데다 정책합의서 내용을 놓고도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협상도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통합신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통합과 의원들은 박 대표가 너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박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합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또 통합신당 모임에서는 통합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 "존재 이유없는 규제 모두 풀 것"

(근혜)

"교육 정책 상향 평준화 바람직"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혜노믹스'에 이어 규제개혁을 하두로 제시하면서, 4·25 재·보선 총력지원과 정책 이슈 선점을 통해 지

지를 대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특히 "내가 한나라당을 개혁해서 제일 선진화된 정당이 됐다"며 "대표가 돼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 없고, 사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 (다음 정부) 할 일이 다르다"면서 "대통령이 원칙을 갖고 소신과 신념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으며, (규제 개혁을 넘어가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똑같이 못 하는 것을 공격

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과 관련해 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은 키워주고 뒤처지는 부분은 지원해 상향평준화를 해야 하는데 전부 끌어내려 똑같이 못살자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대기업엔 세계와 경쟁할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은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잘하는 것까지 끌어내리려 발전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규제개혁의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3대 원칙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및 규제일률 총량제 도입을 통한 '규제 제로(0)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들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중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 중랑을 초청 당원교육'에서 강의를 끝마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당원들이 손을 내밀자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며 이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기념관' 인제대에 건립키로

靑, 학교측과 구체 협의 중

"예산 20억 확보는 사실무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재임 중 참여정부와 노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를 기념하고 각종 기록물 등을 전시하는 '노무현 기념관'이 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의 인제대에 건립될 예정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학교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낙환 이사장과 이경호 총장 등 인제대 관계자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설치하겠다는 학과 측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백 이사장 등의 뜻을 전달받고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윤 수

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노 대통령 기념관을 인제대에 건립키로 한 것은 노 대통령께서 퇴임 후 귀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이왕이면 고향인 김해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 인제대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은 인제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학교 측은 사전에 청와대 비서실에 학교발전 차원에서 노 대통령 기념관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정부가 노무현 기념관 사업을 위해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혹시 그런 금액 얘기가 나왔다면 인제대 측이 나름대로 예산 소요 및 조달 문제 등 밑그림을 그려본데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도서관' 최초로 정부 예산 건립

'YS 기념관' 협의 중, 전두환 공원 논란

역대 대통령 기념관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은 '김대중 도서관'이다.

DJ 퇴임 직전인 2003년 1월 아태재단이 동교동의 100억원 대가 넘는 아태재단 건물과 DJ가 소장한 1만6천여종의 장서 및 각종 사료를 연세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연세대측이 도

서관 설립을 제안해 그 해 11월3일 개관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말 명지대에서 'YS 기념관'을 짓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YS가 재임중 실시한 금융실명제 등과 같은 주요 개혁정책과 군정종식 및 문민정부 수립 등을 기념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반민주 세력'이라는 오명으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함천군에서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을 전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으로 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5월 1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제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편)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희소식 수료 **한빛고시**

기장주부 실업자 지방여성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시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탁월한 합격 시스템

●출결관리 ●학습 성취도에따른 개별 분석지도

●지습실, 사물함 무료 사용

한빛 1위 **A+ 현대고시학원** 236-2467~8 (동부경찰서 옆)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 "第一" 합격 "最多"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7.9 공무원 완전 대비

기술직렬 ... 행정직렬 ... 공안직렬

시험 서울 지방직 : 7월 8일 시행 1723명 전남 : 6월 23일 161명

안내 전북 지방직 : 제2회 9급 행정, 사회복지사사 9월 8일 131명

※전남지방 7·9급 행정직 후보기 시험시행예상

※후반기 각 시·도별 9급 교육행정직 9월~11월 시행, 합격응이※

개강: 5월 1일 주·야(휴일)반 모집

★정규이문반: 주간 2개월 야간 3개월 완성

★핵심이문반: 문제풀이반 4주완성

고시명문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중앙초교 후문) ☎ 222-4560

면학부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후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 (062) 251-7959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합격= 한빛에있다! www.hanbitgosi.co.kr

9급 공무원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농림직, 전선직, 보건직, 출입국관리직, 기술직

이론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1개월 완성)**

= 6월 22일 진도 대비 =

충원직 (4.20~6.20) 송미중 **국가경개 무등특강**

한빛공무원학원

●경기도(4월 28일)수송차량 계약합수

●인수기간:3월12일~4월 25일·원격(비:2명진)

●서울시(7월 8일)시험차량 계약합수

개강 5월 1일 (휴/역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